

보도	2023.11.27.(월) 조간	배포	2023.11.24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	책임자	국 장	이 석	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이 윤 길	(02-3145-8482)
	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 공시심사1팀	책임자	실 장	오 상 완	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 장	김 준 호	(02-3145-8422)
		담당자	팀 장	이 주 영	(02-3145-8450)
	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	책임자	부 장	이 원 국	(02-3774-9480)
		담당자	팀 장	이 찬 호	(02-3774-9490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	책임자	부 장	김 영 규	(02-2003-9370)
		담당자	팀 장	정 영 목	(02-2003-9371)

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

- 신규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
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. -

〈 주요 내용 〉

- ◆ 금융감독원은 '23.11.24.(금) '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'를 개최하고 주관사 및 유관기관*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협회, 5개 증권사(미래, KB, 신한, 대신, 신영), 코스닥협회

- ◆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

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①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, ②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, ③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.

아울러,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

◆ 이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, 발행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시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.

① 금융감독원은 상장지원과 투자자보호간 균형있는 심사원칙을 유지하면서 심사체계 및 IT인프라를 정비·개선하는 한편,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, 손익(잠정 포함) 등을 '투자위험요소'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모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고

- 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및 기업실사 준수 사항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, 유관기관 협의체 정례화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② 한국거래소는 실적 관련 정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계획을 확인하고, 예상매출의 판단근거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 할 예정이며

-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살펴보고, 기술평가지 완성된 제품·서비스가 있는 경우 배점을 상향하는 등 상장심사 및 기술 평가 업무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.

③ 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와 논의하여 IPO 주관업무 관련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구체화하여 협회 인수업무 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

◆ 참여기관들은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「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방안」(23.7월)에 따른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,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방안 등 과제*들을 시행·정착시켜 나가는 한편,

○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<참 고>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방안(23.7월) 주요 과제

- ① **주관사 책임성 강화**: 특례상장 기업 조기 부실화시 풋백옵션(6개월)부과,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(3→6개월)
- ② **영업실적 공시 신뢰성 제고**: 공시현황 점검·교육을 지속하고, 증권신고서 및 사업 보고서상 영업실적 추정치·실제값 기재방식을 구체화·표준화
- ③ **공모가 대비 주가 정보 제공 강화**: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(KIND)을 정비하여 상장일로부터 5년간의 주가정보, 주관사별 특례상장 건수, 수익률 등 정보 제공

I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3.11.24.(금)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협회, 주관사, 코스닥 협회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이번 회의는 최근 '과두 사태'로 촉발된 IPO 관련 신뢰성 논란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이 모여 **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**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.

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요

- ☑ 일시/장소 : '23.11.24.(금) 14:00~15:30,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
- ☑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공시·조사담당 부원장보, 기업공시국장, 공시심사실장
 - (한국거래소) 코스닥시장본부장보
 - (금융투자협회) 자율규제본부장
 - (주 관 사) 5개 증권사(미래, KB, 신한, 대신, 신영) IB부문 대표
 - (기업측 협회)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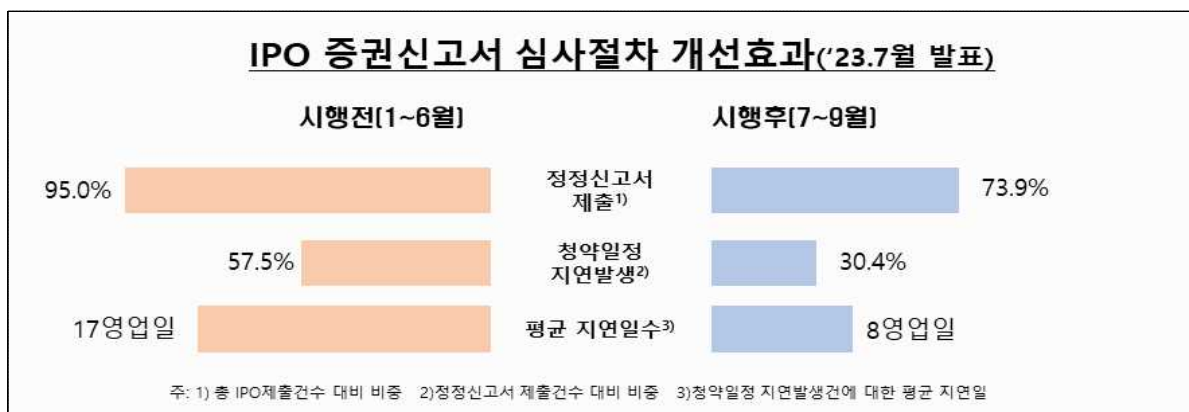
II 주요 논의내용

- 주관사의 기업실사,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및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등 IPO 관련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과제 등 발표 후
- 코스닥협회 및 주관사들로부터 발행사 및 주관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관간 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 및 향후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◆ **혁신·벤처기업 지원과 투자자보호 간 균형 유지 및**
기재방식·정정요구 등 IPO증권신고서 심사체계 고도화
- ◆ **주관업무 수행체계 정비 및 상장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강화**

□ **(심사원칙^{즉시})** 혁신·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·상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간 균형있는 심사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.

- '23.7월 발표한 ❶1주일 내 신속심사·대면협의 및 ❷투자자보호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되
-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사례를 감안하여, IPO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·영업손익 등(잠정 포함)이 '투자위험요소'에 적절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공시토록 하고, 중요한 기재 누락·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.



□ **(심사 고도화^{'24년})** 심사원칙 이행을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심사 관련 IT인프라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.

-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정비하고

- 부실기재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식 정정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에 대한 일정변경은 최소화 하는 등 심사업무의 투명성도 제고하겠습니다.
- 또한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기업 및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*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DART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.

* 주요항목별 심사결과, 정정사항에 대한 효력재기산 판단근거, 주관업무 특이사항 등

□ **(주관사 역할 제고^{'24년})**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상장주관업무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.

- 이를 위해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구체화, 기업실사시 준수사항,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*,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

* 주관회사별 공모가 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방법·비교지표·할인율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되, 그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시 필요한 내부승인 절차 등을 규정

- '24년 중 업계 및 유관기관 공동*으로 T/F를 구성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

* 발행사, 주관사, 정보이용자(기관투자자 등), 학계, 자율규제기관(협회) 등

□ **(유관기관간 협조^{즉시})** 상장업무의 효율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.

- 지난 9.20.부터 시행중인 금감원-한국거래소간 정보공유 체계*의 정착과 발전**을 도모하고, 금감원-주관사-협회간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주요 심사현안별 신속한 실무 해결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.

* [한국거래소→금감원] 위험평가보고서, 기술사업성 내용/[금감원→한국거래소] 정정요구서 구체적 내용

** 정보공유 성과 분석·평가, 기관간 상장·공시 실무협의체 활성화 등

- ◆ 지난 7.27 발표한 「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」에 따라 **주관사 책임이 확대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**
- ◆ 이에 더해, **심사 이후 실적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** 하고, **예상매출에 대한 판단근거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**

□ **(기술특례기업 사후관리 강화)**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후 조기 부실화* 방지를 위한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**하여

* (조기 부실화)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·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 발생

** ①풋백옵션 부과(협회 규정), ②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(3개월→6개월, 거래소 규정)

○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상장시키겠습니다.

□ **(공모가 적정성 등 감시 강화)** 기술특례상장 관련 정보* 제공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모가 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감시·견제 기능 강화하겠습니다.

* 상장일로부터 5년간의 주가정보,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, 수익률 등 정보

□ **(실적공시 사각지대 완화)** 상장예비심사 이후 예상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가 큰 경우 이를 투자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

○ 심사 과정에서 심사이후 상장 이전까지 기간동안의 매출정보에 대한 투자자 대상 공시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겠습니다.

□ **(예상매출 판단근거 제공)**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'시장성 의견서*'를 주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,

* 상장심사서류로서 주관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기술기업 시장성 의견서

○ 미래의 다양한 가정에 입각한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*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하겠습니다.

* 회사 제시(낙관적)·중립적·보수적 시나리오 등

- **(상장심사·기술평가 고도화)**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*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요구하고
 - * 공모자금 사용계획, RCPS·CB 전환 및 리픽싱 조항 조정 등
- 기술평가지 완성 제품·서비스가 있는 기술기업의 경우 사업화 수준의 평가 배점을 상향하여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겠습니다.
- 또한, 기술특례기업 상장 심사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, 전문평가 기관 확대 등으로 우량한 기술특례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3 IPO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등 개선(금융투자협회)

◆ 기업실사 내부통제 강화 및 기술특례기업에 대한 최소 실사기간 확대,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 등 IPO 주관업무 개선 검토

- 주관회사의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영을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,
 - 기술특례기업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연장(예비심사청구 2개월 전 → 3개월 전) 및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방안 모색 등을 통해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·개선토록 하겠습니다.

III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협회, 주관사 등은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고 발행기업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.
 - 또한, 금일 논의된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.

※ [별첨] 김정태 금융감독원 공시·조사담당 부원장보 발언자료 1부